

ICT규제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양형목*, 권수지*, 박유영*

한세대학교

Problems and solution in the ICT Regulation

Hyung-mok Yang*, Su-ji Kwon*, Yu-yeong Park*

Hansei University

E-mail : didgudahr@naver.com

요 약

ICT 관련 규제들을 살펴보면 현실에 맞지 않거나 실행하기 어려운 규제들이 많다. 정부에서는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발표하여 ICT기술의 발전을 도모하였지만, 기업들은 정책으로 인해 발전하지 못한다고 생각하였으며, 세계 최고 수준에 도달해있는 기술이 있지만 규제로 인해 국제지표에서는 그다지 높은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국내의 규제를 바라보는 몇가지 시선을 본문에서 다루고 문제점들의 해결방안을 모색하였다.

ABSTRACT

If you look at the regulations about ICT, you can notice that many of them are not realistic or difficult to carry out. The government has been planned for the development of ICT technology by announcing '3-year economic innovation'. However the enterprises argued that those planning rather ruined our development. The world's highest technology is in South Korea, but we couldn't make a good result in the national index. Therefore we will find some solutions of several points of view of regulations in our country which we handle in the text.

1. 서 론

요즘의 ICT산업의 규제는 현실과 동떨어져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논란에 휩싸여 있다.

ICT 부문의 성장을 위해 제정하였지만, ICT와 관련이 없는 부서에서 제정하였기 때문에 현실성이 없어 지키기 힘들거나, 현장에서 필요한 법령이 아니기 때문에 지키지 않는 법령으로 바뀌는 일이 비일비재 하고, 회사의 발전을 가로막거나 방해하는 규제도 많다.

현재 ICT산업은 박근혜 정부가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발표함으로써 일자리 창출과 투자촉진을 위한 규제개혁을 시행[1]하고, 미국이 정보통신 기술 플랫폼을 통해 신성장 산업에서 주도권을 강화하고 있는 상황을 우리나라 ICT산업의 모티브로 삼아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2]. 하지만 박근혜 정부의 계획과는 다르게 기업들은 정책 때문에 발전하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1] 최근 박근혜 정부에서는 2015년부터 5년 후인 2020년까지 소프트웨어(SW), 사물인터넷(IoT) 등 전략 육성 정보통신기술(ICT) 산업 발전

을 도모하기 위해 9조원이라는 거액의 자금의 지원하여, ICT 생산규모를 240조원, 수출은 2100억 달러까지 키우기로 했지만 규제에 막혀 예상수출(액에 도달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3]

국제전기통신연합(ITU)에서 발표하는 ICT발전지수에서 우리나라는 2010년 이후 줄곧 1위를 유지하고, 전자정부 구현기반 수준을 측정하는 UN의 전자정부발전지수에 있어서도 2회 연속 1위(20)를 하는 등 물리적 기반은 세계 최고의 수준에 도달해 있다고 할 수 있다. 반면, 지난 수년간의 ICT 융합과 확산을 위한 정부조직개편 등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ICT의 사회경제적 확산 및 활용을 보다 넓게 다루는 국제지표에서는 그다지 높은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4]

이 때문에 추진단은 규제 개선을 통해 ICT 분야의 경쟁력을 재고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5]

이처럼 ICT산업의 규제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문제점을 파악하고 노력해 다양한 대처방안이 나왔으나 좋은 결과가 나오지는 않았다. 현 규제를 살펴보면 어떤 문제점이 있고 어떤 방향으로 규제를 제정하고 수정하면 되는지 살펴볼 것이다.

II. 본 론

2-1. 낡은 규제

“낡은 ICT규제로 인해 이용자는 배제된 채 공급자간 갈등만 반복적으로 초래되고 있다. 규제 대상은 규제회피에만 몰두하고, 미규제 대상은 규제에 기대거나 규제 대상에만 네거티브활동에 집중하고 있다.” 라고 새누리당 권은희 의원이 발언[6]을 하였는데, 우리나라는 현재 이렇게 정부의 의원이 직접 언급 할 정도로 우리나라의 낡은 ICT규제들은 많은 문제를 자아내고 있다. 구체적으로 모바일 법령의 예를 들어,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제4조(지원금의 과다 지급 제한 및 공시) 제 1항에는 방송통신위원회는 가입자 평균 예상 이익, 이동통신 단말장치 판매 현황, 통신시장의 경쟁 상황 등을 고려하여 이동통신단말장치 구매 지원 상한액에 대한 기준 및 한도를 정하여 고시한다. 제 2항, 이동통신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상한액을 초과하여 지원금을 지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출시된 지 15개월이 경과한 이동통신단말장치는 제외한다. 제 3항, 이동통신사업자는 이동통신단말장치별 출고가, 지원금액, 출고가에서 지원금액을 차감한 판매가 등 지원금 지급 내용 및 지급 요건에 대하여 이용자가 알기 쉬운 방식으로 공시하여야 한다. 제 4항, 이동통신사업자는 제3항에 따라 공시한 내용과 다르게 지원금을 지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항 대리점 또는 판매점은 제3항에 따라 이동통신사업자가 공시한 지원금의 100분의 15의 범위에서 이용자에게 지원금을 추가로 지급할 수 있다. 제6항 대리점 또는 판매점은 제 3항에 따라 이동통신사업자가 공시한 내용과 제 5항에 따른 추가 지원금을 이용자가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영업장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 7항 방송통신위원회는 제3항 및 제6항에 따른 공시 및 게시 방법, 내용, 주기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한다.[7] 라고 명시되어 있다. 스마트폰 이용자들은 생각을 하지 않고 과도한 보조금으로 이용자 차별 해소를 위해 파파라치 제도를 이동통신사가(SKT, LG U+,KT) 자율적으로 운영하지만 27만원 이상 할인을 해줄 시에 문을 닫게 만들거나 단말기 유통법이 생기며 보조금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도 혜택을 받지만 단말기 출고가 및 요금 인하 경쟁으로 사용자 입장에서 혼란스럽고 규제를 피해 불법보조금 지원을 찾고 있거나 배터리 분리형 핸드폰이지만 배터리와 배터리팩은 따로 구매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이처럼 현실성이 없고 현장을 고려하지 않아 배정된 규제들은 사람들이 대부분 지키지 않거나 규제의 틈을 이용하여 이용하는 상황이 일어나고 있다.

강영철 국무조정실 규제조정실장은 “낡은 규제를 바꾸려면 6개월이 걸린다.” 는 언급을 하며, “낡은 규제가 문제인 이유는 현장을 보지 않고 규제 개선책을 생각 한다.” 규제개혁은 규제를 당해본 사람이 주도해야한다는 현장주의를 강조했다.[8]

최경진 가천대학교 법학과교수는 새로운 ICT 규제가 갖추어야할 주요 요소로서 N(네트워크) 중심에서 C-P-N-D(컨텐츠-플랫폼-네트워크-디바이스)로 확장하는 포괄적 규제와 수직적 칸막이식 규제에서 수평적 규제체제로의 전환, 네거티브 규제 및 사후 규제 중심, 국내와 해외사업자 역차별 해소 및 동등규제, 공급자 중심에서 이용자 관점의 정책전환 등을 주장하였고,

2015년 4월 10일에 열린 ICT규제 경쟁 및 규제 개편 모색 토론회에서 새누리당 권은희 의원은 “규제가 네트워크 등 개별 시장에 집중되어 ICT시장 전체를 포괄하지 못하는 문제를 개선하고자 한다.” 면서 “이번 토론회에서 논의된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ICT정책 로드맵수립 및 이에 근거한 전기통신사업법개정안을 마련하고 이해 관계자 협의 등의 절차를 걸쳐 국회에 제출할 예정” 이라고 밝혔다.[9]

2-2. 규제의 사각지대

모든 법령들이 그렇듯이 ICT규제에도 빈틈이 있다. 여기서 지칭하는 규제의 사각지대란 오래된 규제들을 처리할 때 직접적으로 관계되지 않아 정확히 명시되지 못한 규제의 허점들인데, 드러난 문제들을 처리한 뒤에 나타난 숨어있던 문제들로, 이 때문에 사업자가 손해를 보기도 한다. 대표적인 예를 들어 애플 스토어에는 게임머니 결제에 한도가 있지만 구글 스토어에는 한도가 없다. 이렇게 스마트폰 게임머니에 한도가 없는 것을 이용하여 '카드 깡'이 버젓이 이루어지고 있다.[10] 카드 깡이란 100만원을 신용카드로 결제하면서 신용카드사가 해당 가게주인의 계좌에 100만원을 일주일 안으로 입금시켜준다. 반면, 이 가게주인은 나에게 80만원을 현찰로 준다. 즉, 나는 100만원을 한 달 있다가 카드 값으로 내야겠지만, 현재 난 80만원을 받았다. 결국, 난 20만원이라는 이자를 내고 80만원의 현찰을 대출받은 것이다. 반면, 가게주인은 80만원이라는 대출을 해줌으로써 나중에 100만원을 받으니, 즉 20만원이라는 이자 소득이 생겼다. 이것이 바로 카드 깡이고 스마트폰 게임머니를 대신하여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규제에 사각지대 안에서 수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

모바일 이용약관에 관한 법률에 따르자면 제 15조(서비스 이용 제한)의 제5항, 정상적이거나 아닌 방법으로 사이버 자산(ID, 캐릭터, 아이템, 게임 내 머니 등)을 취득, 이용하는 행위, 제7항, “서비스”에 위해를 가하거나 “서비스”를 고의로 방해하는 행위 범죄와 결부된다고 객관적

으로 판단되는 행위. 제15항, 범죄와 결부된다고 객관적으로 판단되는 행위. 제16항,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되는 행위. 위 내용을 위배하여 사전 통보 없이 서비스 이용 제한 조치가 진행될 수 있다.

아울러 제25조(계약해지)의 제2항, “회사”는 “회원” 본인에게 본 약관 제 6조 제3항의 ‘서비스 승낙 거절 사유’가 발생하거나, “회원”이 본 약관 제 11조의 ‘회원의 의무’ 또는 제15조의 ‘서비스 이용제한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기타 “회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할 경우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3항에는 전2항의 내용에 해당하는 경우 “회원”은 유료서비스의 사용권한을 상실하고 이로 인한 환불 및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라고 명시되어있으며 위 내용에 따라 본 약관을 위반 시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게 되는 경우 해당 이용자는 회사에 발생하는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며 이에 따른 법적 조치 취해질 수 있다. 라고 명시가 되어있다.[7]

하지만 사업자들 혹은 소비자들은 앞에서 다룬 예시와 같이 법의 제재를 피하고 있고 법에만 어긋나지 않으면 신고를 할 수 없으니 소비자들은 공급자들에 대한 신고를 못하고 공급자들은 소비자들에 대한 제한을 마음대로 할 수 없다. 이러한 일이 벌어지지 않으려면 사람들이 이런 범죄가 발견이 되면 파파라치 제도를 도입하여 앞으로 구성될 ICT 실무 위원회를 통하여 규제 의 허점을 보완하고 해당된 규제에 대해 정확히 명시할 수 있도록 한다. 혹은 소액결제 한도액을 법령에 명시해 놓으면 좋을 것이다.

2-3.규제 개선 실천력 및 전문성 확보 부족

정부는 최근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였는데 그 내용은 이렇다.

제9조(활성화추진 실무위원회의 운영)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를 위하여 정보통신 관련 단체 및 기업 등의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을 접수하거나 조사하고 그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정보통신 활성화추진 실무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 활성화추진 실무위원회는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장 및 관련 기관·단체의 장으로부터 소속 공무원 또는 임직원의 파견을 받을 수 있다. 활성화추진 실무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국내 전문인력의 양성) 제1항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정보통신 분야의 전문적인 기술, 지식 등을 가진 인력의 육성에 관한 시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하며, 특히 소프트웨어 교육의 저변 확대 및 지역산업의 발전을 위한 소프트웨어 특화교육 활

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7]

현재로서 우리는 ICT특별법이 제정이 되었지만 현황은 규제개선의 실천력이 부족하고 전문가도 아직 확보가 안 된 상태이다. 경제위기를 겪었던 2009년 하반기의 ICT 제조업 고용이 연 5~15%수준으로 감소했다. 다만 2010년에는 ICT 제조업 고용이 어느 정도 호전되어 독일과 미국의 경우 성장세를 보여줬었다.[14] 위의 나라들은 경제 위기를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맞는 규제를 재정비 하고 그 규제들의 실천력을 보여줌으로써 다시 성장세를 보여주기도 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법률 중 제2장 제9조 (활성화 추진 실무운영회 운영), 제 3장 1장 11절 (국내 전문인력의 양성)에 따라 문제점에 대해서 직시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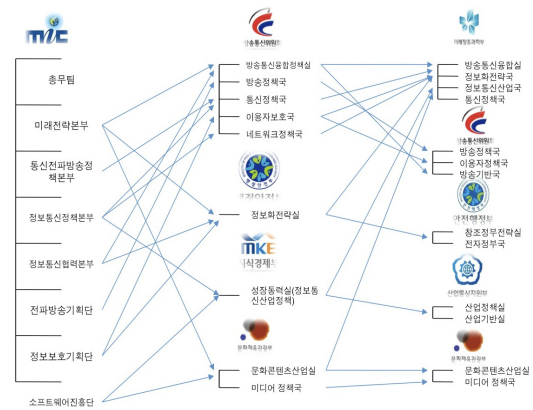


그림 1. ICT관련 정부 업무의 변천

위 그림 1을 보면 예전 국내의 ICT관련 정부 업무가 많이 뿔뿔이 떨어져 있고 맞지 않거나 다른 업무처에 잘못 섞인 업무가 많았다. mic라는 정부조직에서 방송과 통신 계열의 모든 일을 다루고 있었지만, 시간이 흐름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 행정안전부, 지식 경제부, 문화체육관광부 등으로 나누어졌다. 그리고 최근에 또 업무를 재정비하여 다양한 업무처가 완성되었다. 각각의 전공 혹은 능력에 맞는 업무처로 갔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능력에 맞지 않는 일만 처리했을 뿐이었다. 하지만 점점 각각의 업무를 분리 및 합병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조금 더 전문적인 업무를 담당하게 되었고, 최근에 들어서는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 안전행정부 산업통상자원부, 문화체육관광부로 크게 나뉘고 각각의 대분류에 맞게 소분류로 분리 되었다. 그리고 융합 환경에 적합한 다양한 역할과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책임부처를 거대하게 신설하였으나, 부처 간 갈등의 여지가 남아 있고, 이를 합리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안정적인 권한과 리더십이 법리적으로 혹은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 운용을 통하여 부여되지 않는다면 그 목적이 용이하게 달성되지 못할 수 있다. 그리고 ICT를 전담하는

부처를 구성하였으나, CPND 통합 생태계 측면에서 관련 정책이 산재하여 있는 것은 지난 정부의 구도와 다르지 않는 상황에서 정책추진의 비효율을 줄이고, 통합된 전략을 수립 시행하는 것이 관건이다. 합리적인 조정을 통한 역할 분담이 필요하다.

2-4. 규제 실천력 및 전문성 확보를 위한 해결 방안

합리적인 정책의 조정이나 역할분담, 효율적인 추진체계를 구축하지 못하고, ICT 총괄, 전담조직의 부재로 인하여 발생하였던 부처 간의 갈등이나, 정책집행의 비효율 등을 답습하게 되면, 신성장 동력으로서 ICT 발전이라는 목적의 달성이 요원해질 수 있다. 새로운 정부의 출범과 더불어 국가정보화기본계획의 설정 과정에서 특히 합리적인 정책조정을 위한 대안을 검토하고 안정적인 정책 추진체계의 구조를 형성할 필요가 있다.

박근혜 정부의 창조경제 정책으로 인하여 미래를 위한 가장 중요한 투자인 과학 교육의 문제는 더 심각해지고 있다. 교육부가 무작정 밀어붙이고 있는 “문이과 통합형 교육과정개정”에서 과학기술계의 의견은 철저히 무시당하고 있다. 교육과정 개정작업을 독점해왔던 20여명을 넘지 않는 문과 출신의 교육과정학 전문가들이 철용성을 무너트리기에 과학기술의 준비와 대응이 너무 순진했다. 아무준비도 없이 무작정 밀어붙인 소프트웨어 교육의 필수화도 과학교육강화요구를 약화시켰다.[15]

이렇듯 대한민국의 ICT를 이끌어갈 인재들의 활동을 정부의 정책으로 인해 가로막았다. 이러한 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ICT의 미래성을 확인하고 이끌어 나가기 위해 과학기술계의 의견과 문학계의 의견을 적절하게 조율하며 그에 맞는 규제와 정책을 꾸려 나가야 한다. 특히 이번에 창조경제 정책의 경우 대학의 학과통폐합을 자제시키고 각자의 전공에 맞게 전문성을 키워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III. 결 론

앞서 본문에서 다뤘듯이 ICT규제들은 현실에 맞지 않거나 실행하기 어려운 규제들이 대부분이거나, 사람들이 규제에 대해 안 좋은 방향으로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의 ICT규제들이 얼마나 많은 개선점을 지니고 있는지 그리고 이에 대한 해결점을 모색해 보았다. 그 결과 우리나라는 수준급의 기술들이 있지만 합리적인 정책의 조정이나 역할분담, 효율적인 추진체계를 구축하지 못하고 전담조직의 부재로 인하여 각 부처 간의 갈등과 정책집행의 비효율을 겪고 있었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새로

운 정부의 출범과 더불어 합리적인 정책조정을 위한 대안을 검토해야한다.

“박근혜정부에 들어서서 민간의 규제개선 요구에 대한 수용률은 종전 8%수준에서 37%로 비약적으로 높아졌다. 지난해 이후 정부는 3000건 이상의 규제를 개선하는 등 많은 성과를 올리고 있다.” 라고 강영철 국무조정실 규제교정실장[8]이 말한 것처럼 나라에서도 충분히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ICT 전략위원회 구성으로 인터넷 및 방송통신 융합 활성화에 장애가 되거나 형평에 맞지 않는 규제에 대한 상시적 발굴, 해소체제를 마련하거나 규제 개선의 실효성 및 집행성을 확보하면 낡은 규제를 선제적해소를 추진할 수 있을 것이다.

그중에서도 가장 혁신적인 신규 방송통신 융합서비스의 도입을 제한하는 칸막이식(수직적) 규제체계[9]를 조기에 해소하여 기술과 시장을 따라가지 못하는 문제점과, 서비스 별로 구분된 기존 규제체계의 한계도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 [1] 정현준 외 1명, 「ICT 부문의 등록규제 현황 및 시사점」, 『정보통신방송정책』, 제26권 14호 통권 582호, p23~34, 2014.08.01
- [2] 박소연, 「최경환 “창조경제 혁신센터로 경제순환생태계 만들 것”」, 『파이낸셜뉴스』, 2015.03.30.
<http://www.fnnews.com/news/201503301636043393>
- [3] 김학재, 「정부 ICT산업에 9조원 투입 “2020년 수출액 2100弗 달성”」, 『파이낸셜뉴스』, 2015.03.25.
- [4] 서보현, 「미래정책 포커스」, 『경제·인문사회연구회』, Vol.20, 2003.02.01.
- [5] 김용갑, 「규제개선추진단 ICT 규제개선 적극 추진 한다.」, 『NEWSIS』, 2015.03.03.
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50303_0013510831&cID=10402&pID=10400
- [6] 이진, 「권은희 의원 “ICT 분야 낡은 규제 타파하고 새로운 체계 도입해야”」, 『미디어잇』, 2015.02.10.
<http://www.it.co.kr/news/article.html?no=2795583>
- [7] 국가 법령센터
(<http://www.law.go.kr/main.html>)
- [8] 노영우, 「국민들은 하루하루 전투중인데 낡은 규제 바꾸려면 6개월 걸려」, 『매일경제』 2015.04.03.
<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5&no=318656>
- [9] 김현아, 「권은희 10일 ‘ICT 경쟁 및 주체

- 개편 모색 토론회’ 개최」, 『이데일리』
2015.04.08.
<http://www.edaily.co.kr/news/NewsRead.edy?SCD=JE31&newsid=03630966609334152&DCD=A00503&OutLnkChk=Y>
- [10] 권영전, 「스마트폰 게임머니로 ‘카드깡’ 버젓이… 규제 사각지대」, 『연합뉴스』
2013.01.24.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mid=sec&sid1=101&oid=001&aid=0006056072>
- [그림1]권현영 외 1명, 「정부조직개편과 ICT 규제체계의 개선 : CPND와 정부기능배분」, 『경제규제와 법』, Vol.6 No.1 [2013], 서울대학교 공익산업법센터, p172~187, 2013.05
- [11] 규제 정보 포털 웹 사이트
(www.better.go.kr)
- [12] 미래창조과학부 보도자료 ‘미래부, ‘ICT 산업 경쟁력 강화 위한 규제·제도개선’ 추진’
(<http://www.msip.go.kr/web/msipContents/contents.do?mid=NzM=>)
- [13] 윤건 외 2명, 「규제와 진흥 관점에서 바라본 ICT거버넌스 개편방향 연구」, 『정보화정책』, Vol 20 No2(2013), 한국정보화진흥원, p20~38
- [14] 이경남, 「ICT 인력 고용 현황 및 시사점」, 『방송통신정책』, 2012.09.01, p1~30
- [15] 이덕환, 「ICT산업에 발목 잡힌 미래부」, 『디지털 타임즈』2014.11.11.
http://www.dt.co.kr/contents.html?article_no=2014111202102351607001